



미래좌담회

“국회미래연구원에 바란다”



■ **일자·장소** : 2018년 8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사회** :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 **참석자(가나다순)** :

박형준(전 국회사무총장, 현 동아대학교 교수)

조동성(전 국회미래연구원 준비위원장, 현 인천대학교 총장)

앞으로 매달 개최되는 좌담회의 첫 회로 국회미래연구원 출범에 큰 기여를 하신 두 분을 모시고 국회미래연구원이 갈 길을 알아보았다.

다음 회부터는 미래대비 현안에 대해 합의를 추구하거나 이견의 배경을 알아보는 형식의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임 국회 때 미래연구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시고 법안을 추진하셨던 박형준 전 사무총장과 법안이 통과되고 설립 준비위원장이셨던 조동성 인천대 총장을 모셨다.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힘써 주신 두 분에게 국회미래연구원에 바라는 점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진(사회자)
국회미래연구원장

소주제 1. 국회미래연구원과의 인연

사회자 국회미래연구원 추진과정에서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형준(전 국회사무총장)
동아대학교 교수

박형준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임기 중 추진과제를 물으셨습니다. 그 때 우리 국회가 너무 눈앞의 일로만 싸우고 있으니, 멀리 볼 수 있도록 미국이나 핀란드처럼 미래연구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후 사무총장이 되면서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자 자문도 구하고,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습니다. 원내대표, 반대하는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회자 아쉽게도 성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그 때 잘 뿌려 놓으신 씨앗이 이제 싹이 난 셈이네요.

박형준 당시 행정부가 많이 반대했지요. 국회내에서도 반대가 있었고요. 19대 국회에서 법 통과를 못 시키고 20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국회미래연구원 추진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의화 전의장님과 저는 반신반의 했는데 정세균 의장님께서 성사시켜 주셔서 과거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회자 그런 과정을 거쳐 작년 12월에 법이 통과되고, 1월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조동성 총장님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조동성(전 국회미래연구원 준비위원장)
인천대학교 총장

조동성 입법이 국가의 미래를 다루고, 행정이 현실을 다룬다면, 사법은 과거를 다루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이란 경영대학원에서

전임으로 교수 생활을 할 때, 중국 학자로부터 “중국에서는 입법을 다루는 전인대와 정협의 힘이 가장 강한데, 한국에선 사법, 그중에서도 검찰의 힘이 가장 강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은 국가미래를 설계하는 법을 만드는 조직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못한 것 아닌가?”하는 자괴심과 함께, 자존심이 깎였던 생각이 납니다. 한국도 중국 못지 않게 국가의 미래설계에 관심과 재원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세균 의장으로부터 미래연구원 준비위원장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주제 2.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

사회자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기 전이라 원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저도 연구진 선발에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미래연 설립에 애써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설립된 미래연은 국회 최초의 출연기관입니다. 국회 내에 왜 미래연구기관이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형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5년 단임제가 굉장히 큰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 5년 단위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죠. 다른 이슈와의 연관성,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간혹 발간하는 미래 보고서들에 별로 관심을 두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박형준 예컨대 에너지, 국방, 교육, 인구 문제는 당장의 해결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후를 봐야 합니다. 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해법이 달라지게 되지요. 저출산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미 인구추세가 꺾였는데,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정책이 1996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내 연구기관들에서 미래 연구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내 연구기관은 주로 분야별 미래만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연구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이므로 종합적 시야를 갖는 국회내 기관이 더 적합하지요.

조동성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은 국회에 있는게 맞습니다. 미래는 결국 입법을 통해 구현되므로 국회가 미래연구 기능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된 미래에 따라서 국가의 틀을 설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1948년 국회개원 때 국회미래연구원을 만들지 않았던 것이 아쉽습니다. (웃음)

사회자 미래연구원은 국회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박형준 국회는 거의 정쟁의 구도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해결 가능성이 커지는데 단기 현안에 매몰되니 갈등만 커가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이 있으면, 각 주요 정당들이 미래 어젠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지요. 또 관심 있는 주제를 미래연구원에 연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고요. 연구결과가 각 당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활용된다면 매우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국회가 통찰력을 갖도록 미래연구원이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조동성 그동안 미래 연구를 위해 개발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해서 국회가 보다 과학

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는 미래에 대해 폭넓고 융합적인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사회적, 교육적 체계가 미비합니다.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힘을 키워 드리는 것도 미래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소주제 3. 연구목표

사회자 국민과 국회의 미래 문해율(future literacy)을 높이는 것도 미래연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이네요.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여야 간에 찬반이 나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형준 미래연구원이 너무 독자적인 의견을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맞다 틀리다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숙의하는 장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잘 요약, 전달하는 것도 훌륭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합의에 이르진 못해도 차이의 배경이나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이지요.

조동성 같은 생각입니다. 미래연구원은 가치관을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으로 미래 연구를 조정(coordinate)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슈를 던지는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약 2년 전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별로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도 다 지나간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계속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를 화두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연구원의 역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결과 못지않게 연구절차가 중요하고, 연구결과는 일종의 wake-up call과 같이 주위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법 개정을 연구목표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조동성 미래연구원이 문 앞에 로비스트들이 줄 서는 조직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일에 몰입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몰두해야 하지요. 그것이 미래연구원의 역할입니다.

박형준 기본적으로 총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법안 제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래 전략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 폐지를 제안한다면 미래연구원의 존재가 크게 부각될 겁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ICO(가상화폐공개) 자체를 금지하고 사행성 금융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한 예이지요.

소주제 4. 연구주제와 방법

사회자 미래연구의 주제를 추천해 주신다면?

박형준 신기술혁명과 일자리 생태계의 변화, 기후변화의 정치 경제적 영향, 미중간 각축과 국제정치질서의 변화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솔루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발상으로 이 문제를 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동성 “The future is today.”라는 표현은 현실에 미래가 있다는 뜻과 미래는 현실의 문제다 라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함축합니다. 미래연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또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올 5차, 6차 산업혁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5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특유의 미래 과제는 남북 통일 이후에 나타날 “남북통합”입니다. 기업이나 은행은 3년에 걸쳐 합병한 후 30년에 걸쳐 통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IT 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하고, 입사시험에서 인사고과, 승진에 걸쳐 모든 인사시스템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북이 통일되는 경우,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이 통합되어야 하고, 초중등 학교의 국정 교과서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화폐가 통합되고, 법정 전염병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통합 작업은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시작할까요?

사회자 미래연구 방법에 대한 조언이 있으신지요?

조동성 미래는 확정적이 아니라 수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가 미래연구원의 영문명을 Future가 아니라 Futures라고 쓴 것도 그 때문이죠. 미래예측에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은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 보다는 미래 방법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Scenario Planning, Decision Analysis, System Dynamics 등 다양한 기법의 도움을 받아 여러 변수가 서로 맞물려 가는 복합적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정책효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육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박형준 맞습니다. 교육은 우리나라 집단 지성의 한계를 보이는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 축소라는 좁은 문제 인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래형 인재양성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지요. 미래연구원에서는 이처럼 미래를 고려하면서 지금의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정책실패 혹은 미래예측 실패 사례들을 기초로 미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출산 대책으로 10년간 130조를 썼는데,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면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자 그럼, 끝으로 미래연구원에 대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형준 미래연구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신호 요소들을 정리해서 그 속에서 임팩트있게 문제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전기자동차가 일상화되고 AI가 일반화되면 전기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앞에 닥칠 위험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연구원의 가치를 조기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동성 미래예측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같이 공부한 선배의 논문이 “원유가격 예측”에 대한 것이었는데,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한달 차이로 논문이 휴지조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일쇼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에 대해 대처를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해 미래학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래연은 이와 같은 돌발요인의 가능성을 미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자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